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치를 바로세워라!

지난 5월 9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의 법적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한 지 만 4년 이 됐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 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통일부가 구성한 정책혁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 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 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다.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 (人治)에 의해 개성공단 폐쇄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진행을 미루 고 있다. 재판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심판하여 정의를 세 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法治)가 인치(人治)를 이겨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 쇄에 관한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되었고 인치의 결과만 남아있다. 법치를 바 로 세워야 한다.

무너진 정의로 삶의 벼랑끝에서 하루 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 개성기업인 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확인”해 주길 호소한다.

2020년 5월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